

2018년 6월 7일

emerics@kiep.go.kr

말레이시아, 마하티르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



©REUTERS

- 2018년 5월 10일에 출범한 마하티르 신정부는 공공부채 축소, 핵심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함.
 - 2018년 5월 9일 치러진 총선에서 마하티르 총리(Mahathir Mohamad)가 이끄는 4개 정당 연합인 PH(Pakatan Harapan)가 전체 의석 222석 중 113석을 확보,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61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함.¹
 - 정부는 예상 밖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, '취임 100일 이내 이행 10대 공약'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함.
 - 신임 재무부장관 림관영(Lim Guan Eng)은 5월 22일 취임 이후 첫 회견에서 말레이시아 공공부채가 전임 나집 정권에서 발표한 수치를 크게 웃도는 1조 링깃(약 2,514억 달러, GDP의 80%)에 달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공공부채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함.²
 - 전임 나집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채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약 6,868억 링깃(약 1,730억 달러, GDP의 약 51%)임.
- 정부는 중점 과제로 부상한 공공부채 경감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, 물품용역세(GST: Goods and Services Tax) 폐지 등 핵심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음.
 - 마하티르 신정부는 경제성이 낮은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단 선언, 희망펀드(Tabung Harapan Malaysia) 설립, 공공기관 통폐합, 지출 축소(장관 임금 10% 삭감 등) 등 공공부채 축소 대책을 발표함.
 - 정부는 2018년 5월 말 싱가포르~쿠알라룸푸르 고속철 건설사업(사업비 500억 링깃, 약 126억 달러)과 MRT 3호선 건설사업(사업비 약 400억 링깃, 약 100억 달러)을 취소함.
 - 마하티르 총리는 2018년 5월 30일 희망펀드를 설립, 부채 상환을 위한 대국민 모금운동을 시작함.

1) 마하티르 총리는 1981~2003년에 22년간 총리를 역임함.

2) 정부의 GDP대비 공공부채 역제치는 55%임.

- 정부는 단기적으로 GST 폐지, 특정집단 대상 연료보조금 부활 등 ‘취임 100일 이내 이행 10대 공약’ 실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(표 1 참고).
- 재무부는 총선 개최 일주일 만인 5월 16일에 총선을 승리로 이끈 핵심 공약인 GST 폐지를 선언했으며, 대체 세원 확보를 위해 기존 판매서비스세(SST: Sales and Services Tax) 부활 및 지출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밝힘.
 - 이에 따라 2018년 6월 1일부터 GST 세율이 6%에서 0%로 변경될 예정이며, 정부는 GST 대체 세원 발굴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GST를 완전 폐지할 예정임.

표 1. 취임 100일 이내 이행 10대 공약(10 Promises in 100 Days)

구분	공약	구분	공약
1	물품용역세(GST) 폐지	6	월소득 4,000링깃(약 1,000달러) 미만 졸업생에 대해 학자금대출(PTPTN) 상환 유예
2	특정 집단 대상 연료보조금 부활	7	부패 연루 기관 (1MDB, Felra, MARA, Tabung Haji) 대상 조사 실시 및 거버넌스 개혁
3	Felra 이주민 부채 탕감	8	「Malaysia Agreement 1963」 이행위원회 설립
4	전업주부 대상 EPF(Employers Provident Fund) 도입	9	소득 하위 40% 계층에 대해 등록 사립병원 이용시 보조금 500링깃 지급
5	전국 최저임금 단일화 및 인상	10	외국기업이 수주한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조사 실시

자료: PH 공약집(Buku Harapan: Rebuilding Our Nation Fulfilling Our Hopes), p. 14.

- 정부가 공공부채 감축과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 이행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, 부채 경감이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공약 이행 지연,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음.
- 신용평가회사 무디스(Moody's)는 정부의 GST 폐지 조치에 대해 석유 부문에 대한 세수 의존도 증가, 세수기반 축소 등이 우려되며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 없이는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함.
 - 2018년 기준 GST로 인한 세입은 조세수입의 18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, SST를 통한 조세수입은 통상적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10% 정도에 불과해 대규모 지출 삭감, SST 외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- 막대한 공공부채를 감안할 때 연료보조금 부활,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포퓰리즘 공약 이행은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, 동해안철도(ECRL: East Coast Rail Link) 건설사업 등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.
 - 총사업비가 557억 링깃(약 140억 달러)에 달하는 동해안철도 건설사업은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(CCCC)가 수주, 2017년 착공함.³ **EMERiCs**

참고자료

PH 공약집, Bloomberg, IHS Markit, Nikkei Asian Review, EIU 등

(작성: 신민금 전문연구원 /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)

3) 사업비의 85%는 중국수출입은행 차관(이자율 3.25%)으로, 나머지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슬람채권(Sukuk)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.